11개월 만에 33억 모금… 광주 서구 민·관 나눔사업 '눈길'

#1.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결혼'이 멀게 만 느껴졌다. 서구 덕분에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을 소외감이나 걱정 없이 웃으며 올릴 수 있었다."

#2. "수년 만에 베트남 행 비행기를 탔다. 반가운 가족과 친인척들을 만날 수 있었고, 특히 딸에게 엄마의 나라를 소개할 수 있어 가장 행복했다."

#3.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기회를 마련해 줘 진심으로 감사하다. 아이들 모두 긍정적인 마음과 희망을 갖고 나아갈 원동력이 됐다."

광주 서구의 나눔 프로젝트 '서구 아너스(Honors)'가 출범 11개월 만에 총 33억원을 모으며 민·관 협력 복지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12일 서구에 따르면 고액기부자 모임인 서구아너스는 지난해 11월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을 맺고 공식 출범했다.

서구아너스는 공적 부조의 한계를 보완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구형 민·관 협력 나눔 프로젝트다.

출범 11개월 만에 회원 96명이 33억 2000만원을 기부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역민뿐만 아니라 지역 기업·기관 대표들도 기부에 동참하며 이웃 사랑 나눔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마련한 재원은 '복지 틈새 0(제로), 12달이 행복한 서구'를 뜻하는 '012파트너스' 사업에 활용된다. 매달 한 가지 주제를 정해 추진하는 맞춤형 복지 사업이다.

첫 사업으로 다문화 가족 대상 '엄마 나라, 외갓집 방문' 프로젝트를 추진해 결혼

지난 4월 24일 오전 광주 서구 위더스웨딩홀에서 열린 '당신의 특별한 날 드림(dream) 웨딩' 합동결혼식에서 장애인 부부 6쌍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서구 제공

지난해 11월 '서구 아너스' 고액 기부자 모임 출범
다문화·청년·저소득층 등 맞춤사업, 복지사각 해소

이민자들이 가족과 함께 모국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설 명절엔 전통시장 체험도 함께했다.

자립준비 또는 가족돌봄 청년에게는 장학금, 취업 준비금 등을 지원해 꿈을 펼칠 기회를 제공했다. 돌봄 1인 가구에게 맞춤형 정서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해 고립감 해소와 지역사회 관계망 형성을 도왔다.

또 서구 공무원들이 기부 바자회를 열어 수익금과 서구 아너스 후원금으로 주거 빈곤 아동을 위한 공부방도 마련했다.

무더위 속 폐지 수집 어르신을 위한 '쉼이 있는 여름' 프로젝트를 통해 한 달 간 리어카를 구청에 맡기고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쉼 지원비와 식사 쿠폰을 제공하기도 했다.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펼쳤다.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빛과 바람의 라이딩'과 결혼 예정 장애인의 '드림 웨딩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삶에 희망을 더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과 지역사회 통합·포용 문화를 확산시켰다. 이 밖에도 저소득 호국영웅 지원, 산불 피해민 성금, 명절 맞이 1인 가구 선물 꾸러미 전달 등 사업을 벌여 곳곳에 온정을 나눴다.

서구 아너스는 행정기관·민간단체 간 체계적인 협력 구조가 핵심이다. 서구와 유관기관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관련 사업을 기획하면, 서구 아너스가 재원을 지원하는 상호보완적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서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활 현장 중심으로 서구 아너스의 선한 영향력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석우 기자

광주 추석 불법 현수막 2600여건 철거… "현직만 놔둬" 형평성 논란도

추석 연휴 기간 지방선거를 앞둔 출마 예비 후보자들이 내건 명절 인사를 비롯해 광주 도심 곳곳에 난립하던 불법 현수막 수천개가 철거됐다. '현수막 정치 시즌' 대대적 철거에 일부 후보자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반면, 일선 공무원들은 정치적 오해를 살 소지가 있어 난처한 기색이 역력하다.

10일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광주 도심 곳곳에 내걸린 불법 현수막 철거 건수는 2683건에 이른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288건 ▲서구 344건 ▲남구 1221건 ▲북구 734건 ▲광산구 96건이다.

이 중 귀성객 맞이 명절 인사 현수막 등 정당·정치 관련 현수막은 872건으로 파악됐다. 구청장 예비 후보가 10여명에 달하는 북구가 4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남구 283건, 동구 119건, 광산구 39건, 서구 2건 순이다. 단 서구는 정당 불법 현수막 철거 건수만 집계하고 있어 예비 후보자 등 정치인 개인이 내건 현수막 철거 건수는 포함되지 않았다.

명절 연휴 2683건 철거… 정당·정치 872건
일부 "정치적 의도" 반발… 일선 공무원 난감

공직선거법과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당 대표, 당협위원장 명의의 현수막은 통상적 정치 활동의 하나로 동별 2개까지 15일 동안 설치가 가능하다. 스쿨존·소방시설과 교차로·횡단보도 주변 등 안전과 교통·보행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단속 대상이다.

이외 지방선거 출마를 앞둔 예비 후보자들이 게첨한 현수막은 정당 현수막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 명절 연휴를 맞아 이름·얼굴을 알리기 위한 후보자들의 불법 현수막 게시는 되풀이되고 있다.

명절 때마다 난립하는 불법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교통·보행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탓에 행정 당국이 일제 정비에 나섰지만, 일부 후보자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광주시교육감 예비 후보자 측은 "교육감 예비 후보들이 명절 현수막을 게첨했는데, 현직 교육감 현수막만 연휴 내내 유지됐다. 다른 후보들은 상당 부분 구청에서 수거했다. 구청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지만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구청장 예비후보는 "현직 구청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을 벌이는 다른 구청장 후보들을 견제하기 위해 현수막을 철거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든다"고 말했다.

일부 후보들의 "왜 내 것만 떼느냐"는 등 형평성 제기에 일선 공무원들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한 자치구 공무원은 "현직은 내버려두고 예비 후보자 현수막만 철거했다는 말은 오해다. 일부 발견하지 못한 불법 현수막이 있을 순 있지만 발견 즉시 다 철거한다"며 "후보자들의 항의도 많다. 정치 관행이라거나 정치적 저의를 운운할 때는 난처하다"고 하소연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도 "불법 현수막 단속을 두고 일부 '정치인 견제'라는 오해가 있지만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박 구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석 연휴 광산구 전역이 불법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안타까운 점은 그 대부분이 다음 선거를 염두에 둔 사람들에 의해 게시됐다는 것"이라며 "공직에 도전하겠다는 사람들이 법을 어기면서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정치적 탄압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권철 기자

"수십억 고수익" 코인 투자 리딩 사기 일당 무더기 중형
"죄질 나쁘다" 구형량 보다 높은 최고 징역 8년 선고

가상자산(코인) 선물 거래 리딩(매매 종목 추천·조언)을 빌미로 조직적인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사기·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B(41)씨에게 징역 5년, 나머지 공범 4명에게도 각기 징역 4~5년·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중 5명에게는 각 1393만3200원씩을 추징하라고도 명했다.

A씨 일당은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코인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갖가지 방법으로 이른바 '투자 리딩 사기'를 벌여 피해자 80명으로부터 18억50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주범 격 공범과 공모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거래 영업 활동을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일당은 선물 투자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한 피해자들이 무료 코인을 받거나 투자 정보를 제공받고자 남긴 연락처로 투자 권유 전화를 하는 수법으로 피해를 양산했다.

일당은 '고수익 보장 고급 정보를 주는 채팅방에 초대되려면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며 자신들의 코인 거래사이트 가입·투자를 권유하고 손실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투자 유도 영상을 제작했고, 일부 조직원은 수십억대 수익을 얻은 것처럼 거짓말하며 투자자 시늉으로 피해자들의 추가 투자를 꾀어냈다.

또 영업 조직까지 차려 놓고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과 이름만 같고 실제로는 달라 경제적 가치가 없는 코인 투자를 조직적으로 유도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이들 일당은 가상자산 등 파생상품 전문가가 아닐 뿐더러 가명으로 전문가를 사칭했으며, 피해자들이 코인 투자로 본 손실금의 50%를 수수료로 가로챘다.

'리딩', '후킹', '업셀' 등 복잡한 전문용어를 구사했으나 이는 모두 자신들의 코인 거래 사이트 이용과 입금을 유도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했다.

재판장은 "A씨 일당은 조직적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해 코인 거래 지식이 부족한 수많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 기간 사기를 저지르거나 저지르려 했다.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도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 피해자들은 18억5000여 만원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 개전의 정(뉘우치는 태도)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50만원 또는 100만원에 불과해 실제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도 못했다.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는 그대로 고스란히 피해자들의 몫으로 남았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전민규 기자

"채권 서류 꾸며 경매 낙찰" 변호사법 위반 50대 벌금형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000만원 추징을 명했다고 10일 밝혔다.

부동산 컨설팅업자인 A씨는 2019년 지인인 인쇄업자 B씨를 상대로 허위 채권을 발행·공증한 뒤 B씨의 인쇄기계 등 동산을 법원 경매로 거짓 낙찰받는 등 변호사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인인 B씨가 '입주 건물에 대한 부동산 경매로 인쇄기계마저 근담보 설정·매각 우려가 있다'며 경매 낙찰을 부탁하자, 약속어음 채권 서류를 꾸며 소송을 진행하는 수법으로 2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고 소송 또는 법률 사건에 관한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하고, 법률 사무를 취급하면 불법이다.

재판장은 "수수한 금액과 취급한 법률 사무 내용, 당초 약식 명령이 청구된 벌금액,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송현근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통일화물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 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